

대법 “김기춘·조윤선 재판 다시”

예술위 명단송부 행위 등 ‘의무없는일’인지 심리 더 필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포괄일죄도 인정안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돼 조 전 장관도 2심 재판을 다

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등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

재판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



히거나 협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이 이전에 문제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사건 명단 송부행위가 종전에 했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예술위와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손씻기 철저히 합니다”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군내 유행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소방, 심정지 환자 소생률 17.8%...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평균보다 6.8%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18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청 주관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평가에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발순환회복’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적절한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했을 때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광주 119구급대원들은 538명의 심정지 환자 중 96명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17.8%로 전국 평균 1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병원 응급실 전문의가 화상 연결을 통해 119구급대원에게 전문응급처치를 직접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구급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

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심정지 환자는 초기 발견자의 빠른 응급처치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황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신 ●

해남 비료제조공장서 맹독성 염산 200ℓ 누출

30일 오전 8시40분쯤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한 비료제조공장 창고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인 염산이 누출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9대와 대원 28명을 투입해 오전 11시10분쯤 염산 차단작업을 마치고 흡착포와 모래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3000ℓ 들이 염산보관용 원형탱크 5개 중 4개에서 염산 약 200ℓ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염산강유역환경청은 인근 배수로로 유출된 염산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당국과 누출원인을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지인에 공구 휘두른 5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에게 공구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0시42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공구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공구를 휘둘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심야 흥기 들고 교회 침입·방화 시도 30대

심야에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진경찰서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34)를 붙잡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 한 교회에 흥기를 들고 침입해 창고에 불을 내려 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교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하던 서 목재 게시판에 불을 붙여 소방차 10여대가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불을 꺼 게시판 일부만 뒀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교회 신도가 아니며, 범행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형설수설했다.

경찰은 정신이상 증세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켰다.

110명 신용카드 '96억 카드깡'...사기범 2명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110여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혐의(사기 등)로 A씨 등 30대 2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피해자들에게 ‘세금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9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편취한 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